

# 민주, 돈봉투·김남국·대의원제 ‘집안싸움’

### 결약재에 계과 갈등 재점화 혁신기구 놓고 파열음 지속 “정기국회 전 지도부 퇴진”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약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코인’ 의혹이 터지더니 이번엔 대의원제 준폐 논쟁까지 불거지면서 해묵은 ‘집안싸움’이 다시 가열되는 분위기다. 고질적 계과 갈등은 아이러니하게도 돈 봉투

의혹에 따른 당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재점화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 당내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대의원제 폐지를 들고나오면서다. 장정래 최고위원은 최근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의원제 폐기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 당 대표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인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친명계 조선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끄는 당 혁신위원회는 최근 지도부에 대의원제 폐지·축소안을 각각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대의원제 폐지 주장에는 친명계가 이른바 ‘개딸’ (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을 단번에 키우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들은 지난 대선을 전후로 당내 쟁점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비명계 의원들에게 비난성 ‘문자 폭탄’을 보내 논란이 됐다. 다만, 친명계 가운데서도 증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의원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폐지 논의에 당장 힘이 실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인 수도권 대선 의원은 “대의원제는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위한 근간”이라며 “대의원 권한을 다소 줄일 순 있겠지만 지금 추진하는 것은 당 분란만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제 폐지 문제와는 별개로 당내 ‘개딸

논란’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와도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의원을 비판한 당내 청년 정치인들에게 강성 당원들이 ‘온라인 공격’을 가하면서 이 논란은 원외까지 확대되고 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당원 모임에 갔다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했다며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당원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그 입으로 이재명을 말하지도 말라’고 했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지도자를 자임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면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며 “권한을 가진 만

큼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기류 때문에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 공격 중단’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그러나 친명계 반대에 무산돼 ‘개딸’ 문제에 대해서도 계과 간극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내달 중순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혁신기구 권한을 놓고도 친명계와 비명계 간 신경전이 거세다. 비명계는 지도부가 당 쇄신과 관련한 전권을 혁신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는 선출직 지도부의 고유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여서 혁신기구 출범 직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처럼 일련의 약재와 논란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오며 잠시 잤아들었던 ‘질서있는 퇴진’ 요구도 비명계에서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비명계 일각에선 9월 정기국회 전에 이 대표가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들린다. /연합뉴스



오염수 투기 반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29일 오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에 오염수 투기 반대 성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후쿠시마 시찰단, 금주 대국민 보고”

### 성일종 “수산물 수입 없어”

국민의힘은 2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귀국을 계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는 야당 공세에 대해 ‘고담 정치’라고 일축했다. 또 정부 시찰단을 ‘들러리’로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인 정부에 임명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역공을 펼쳤다.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2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

문에 금주에 (시찰단의) 보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 여러 가지 분석이 끝나고 나면 분석한 것에 대해, 또 갔다 온 결과에 대해 국민 보고도 있을 거고 당에도 와서 보고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찰단 명단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마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2021년 8월 문제인 정부 시절 약 30여명을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들로 뽑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TF를 가동했는데, 이

번에 간 분들이 문제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당시 TF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다 갔다”고 강조했다.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성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 방류하는 것을 찬성할 적이 없는데, 이게 국제법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기준치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관련 공세에 대해 “괴담 정치로 과학을 이기겠다는 나라가 문명국가에 몇 개나 있느냐”며 “폭력을 지켜 주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2030 잡아라’ ...국힘, 청년층 공략 가속화

### 김남국 사태 민주 이탈표 잡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진 후 민주당의 청년 지지층 이탈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각종 선거에서 취약 지대로 꼽혀온 2030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에 따른 20-30대 청년층 이탈은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내 TF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26일 조사단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조사 결과 ‘김남국 사태’와 관련한 청년 세대의 분노가 국민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힘은 청년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성패를 좌우할 내년 4월 총선 최대 승부처를 2030 표심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번 ‘민주당 위기’를 ‘국민의힘 기회’로 바꾸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이미 당내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를 통해 취업준비생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1호 정책으로 내놨다. 오는 30일에는 해커톤 방식 정책 오디션을 통해 청년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공개 선발한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 “시민 불편 야기 불법집회 엄정 대처”

### 내일 도심집회 민노총 ‘기득권’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노총이 또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의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노동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200일 동안 계속되는 ‘건설 현장 주요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그 연장선의 활동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까지 938건, 5,570명을 단속해 이 중 92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03명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603건, 4,024명에 대해서는 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로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 노조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 [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